

한동훈 “野, 증시 폭락 계기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국힘 원내대책회의...추경호 “주식시장 근본적 점검 필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위메프·티몬 사태’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이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결국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토름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었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략적,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언했다.

정부가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 정부 측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주가 시장은 중동 위기 등 악재가 있지

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했다”며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선 시장 안정 조치와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증시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증시의 상승 동력을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된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이 뭔지 분명히 분석해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 성장 능력, 기간 주가 상승 폭을 볼 때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도 “어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해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 여러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리메프사태대응TF 1차 회의 적극적 피해 구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시위 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방위 “KBS·방문진 이사 선임 불법 입증할 것”

방통위 현장 검증...자료 제출 요구 목살 등 항의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과 고성이 시작부터 쏟아졌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찾아 이진숙 위원장·김태구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장은 입장 전 “방통위는 독립기구, 대통령 직속기구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은 항의 방문이 아니라 상임위원에서의

결된 현장검증이었던 때문에 과거처럼 청사 출입부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발급과 장소 준비 부실 등을 놓고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비협조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김태구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참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국장급 간

부들은 “법제처에서 재의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회신했는데, 이후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과 관련해라도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사안이고 김 직무대행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직무대행은 오후 중 청사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정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통신 사찰 주도 강박신 검사 탄핵 추진”

민주 “당내 의원 등 139명 대상 149건 조회...윤석열식 블랙리스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여론과 검찰을 향해 맹공을 이어 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화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한 발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며 “지금에 어느 때인데 대규모 통신 사찰을 하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냐”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기밀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

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된 것에 대해선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유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 사찰을 주도한 강박신 검사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온 것”이라며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총선에 개입한 정치 검찰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6일 이들 동안 당내 전수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9명을 포함해 보좌진·당직자 등 총 139명을 대상으로 149건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세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 예고

“한동훈, 약속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윤준중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

을 놓고 “자체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

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